



프랑스 제조업의 쇠퇴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김상배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박사과정(노동경제학))

■ 머리말

지난 9월, 새학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정치 일정도 시동을 걸었다. 화두는 여전히 '위기'이다. 국내에서는 고실업 저성장이라는 잿빛 전망이 드리우고, 대외적으로는 유로존과 관련된 위태로운 상황들이 현실을 더욱 옥죄어 오고 있다. 유럽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올랑드(Hollande) 대통령은 유로존의 위기에 대해 '최악은 벗어났다(지나갔다)'고 진단했지만, 그의 말을 끝이 끝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10월 초부터 노사간의 장기 협상 마라톤이 시작했다.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이며, 연말까지 진행된다. 핵심은 '고용안정화'이다. 실업률이 좀처럼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자동차 회사 푸조(PSA)의 8천여 명 인력감축 계획 발표 이후 연이어 다섯 개의 대기업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상으로 기존의 일자리 지키기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자리 파괴의 대부분은 제조업¹⁾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산업의 영구적인 구조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 가는 만큼, 이 부문의 쇠퇴는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난 수년간, 특히 200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프랑스 제조업 부문 고용 파괴 현황을 다뤄보고자 한다.

1) 이 글에서 '제조업'이란 일반적인 제조업보다 넓은 의미로, 2차산업에서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통칭한다(광업, 수도, 가스, 전력 등). 한편 기존의 제조업(manufacturing)을 표현할 때는 영문과 함께 표기하였다.

■ 심각한 고용파괴

지난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산업부의 명칭이 ‘산업(생산적) 재건부(redressement productif)’로 변경되었으며, 사회당 내에서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던 아르노 몽트부르(Arnaud Montebourg)²⁾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초까지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20만여 개가 창출됐다. 즉 순감소분이 30만 명에 달한다. 더구나 창출된 일자리 중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급격한 감소를 보였던 간접고용 일자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13만 개가량 증가했다. 정규직이 파견직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변화이다. 시간제 근로와 불완전근로³⁾ 역시 증가했다. 실업률의 측면에서 보면, 남부 유럽 국가들⁴⁾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에 가까운 프랑스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용센터(Pôle emploi)⁵⁾에 등록된 인원이 5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300만 명이 실업상태이다. 게다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실업보험이나 국민연대기금(Régime de solidarité nationale)⁶⁾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48.7%만이 실업 관련 수당 수혜자).⁷⁾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7월 기준 평균 실업상태 지속 일수는 2008년 7월과 비교했을 때, 404일에서 467일로 증가했다.

2) 그는 당내 경선 시기, 탈세계화, 즉 세계화에 반대하며, 사회당의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3) Sous-emploi, 영어로는 underemployment. 전일제 근무를 원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4) 이탈리아는 10.7%, 포르투갈은 15.7%, 그리스는 23.1%, 스페인은 25%의 실업률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5) 2005년 이후 직업 알선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긴 했지만, Pôle emploi는 여전히 프랑스 고용문제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취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대부분이 이 기관에 등록을 하며, 기관은 이들을 다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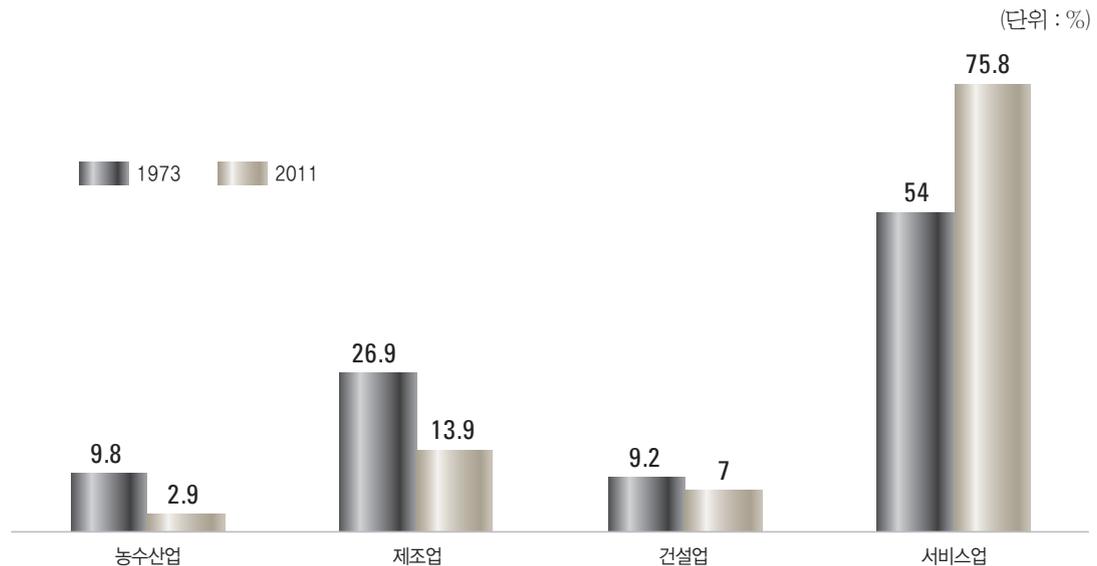
6)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연대보장체제이며, 실업보험 혜택 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들 중 특정한 조건에 일치하는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7) Le Monde, 2012년 9월 27일자, “Le nombre de chômeurs en fin de droits explose”.

■ 제조업의 쇠퇴

제조업 분야로 좁혀보면, 2012년 Cereq⁸⁾의 보고서는 취업 초년생 중 17%가 제조업 분야에서 그들의 직업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농산 및 식료품 산업 5%, 중간재 5%, 소비재 3%, 자동차 2%, 설비재 2%로 총 17%). 하지만 2011년 Insee(통계청)의 고용조사에 따른 전체 임금 생활자 중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비중은 13.9%였다(그림 1). 즉 부문 밖으로의 이직률이 높았다. 2011년 기준, 제조업 부문 총 종사자 수는 약 360만 명이며, 기업은 22만 8600여 개에 이른다. 1973년 6백만여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프랑스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1970년부터이지만, 1973년까지 제조업 종사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30년 호황기에 꾸준히 증가했던 이들의 수가 1973년 석유과동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그림 2). 더 큰 문제는 지난 2007년 말 위기 이후 급감했던 취업자 수가 2009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에서는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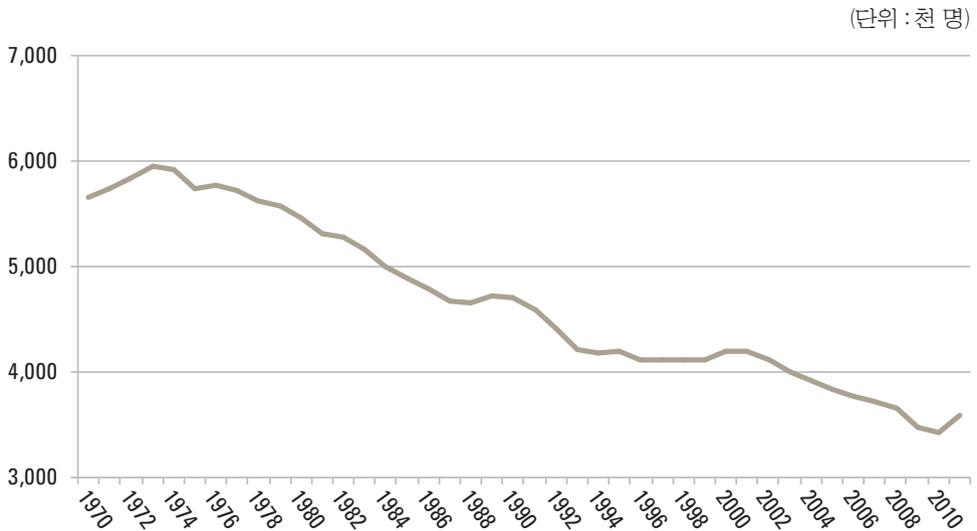
[그림 1] 부문별 종사자 수 비중의 변화



자료: INSEE, estimations d'emploi.

8) Centre d'études et de recherches sur les qualifications(세렉)은 공공연구기관으로, 노동시장에서 직업교육 및 숙련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담당한다.

[그림 2] 제조업 종사자 수의 변화



자료 : INSEE, estimations d'emploi.

은 지속적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부문 공장 수의 감소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 중 921개가 문을 닫았다. 물론 560여 개의 새로운 공장이 문을 열었지만, 순감소 수가 356개소에 달한다(표 1). 탈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Ameco⁹⁾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manufacturing)이 차지하는 비

〈표 1〉 국제기관 고용보호지수의 비교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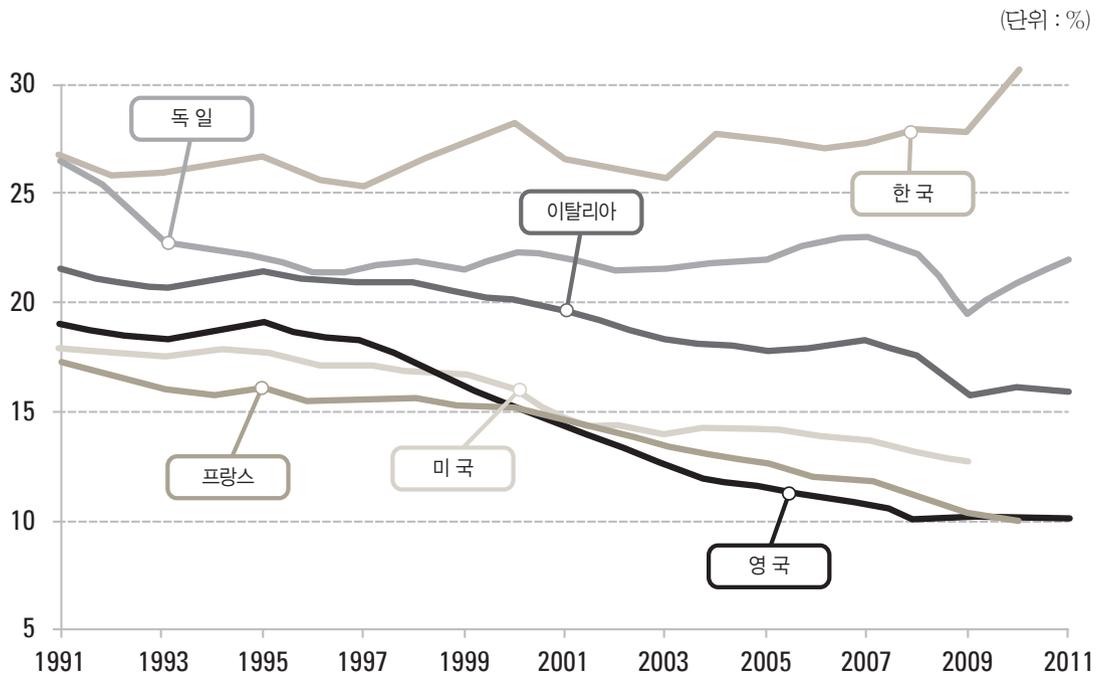
	'09 상반기	'09 하반기	'10 상반기	'10 하반기	'11 상반기	'11 하반기	'12 상반기
폐쇄	223	149	127	110	92	86	134
신설	66	70	109	97	81	55	87
증감분	-157	-79	-18	-13	-11	-31	-47

자료 : Trendeo, Alternatives Économiques에서 재인용.

9) The annual macro-economic database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DG ECFIN). 유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럽 및 OECD 국가들의 경제 관련 자료 서비스이다.

중을 나라별로 나타낸 결과, 한국이 30.6%로 1위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10%로 영국과 그리스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그림 3]의 경우, Ameco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잡지가 계산한 것으로, 제조업(manufacturing)뿐만 아니라 광업, 에너지산업 등 건설업을 제외한 2차산업 모두 포함)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한국의 경우 최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비중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잠시 하락했으나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¹⁰⁾

[그림 3] 전 산업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변동



자료 : Ameco, Alternatives Économiques 자체 계산, 재인용.

10) 동시에 이 자료는 제조업과 제조업(manufacturing) 사이의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제조업 내에서 제조업(manufacturing)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 경쟁력의 하락, 그 원인 찾기

그렇다면 이렇게 탈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무역수지 적자, 기업의 낮은 마진율 등 프랑스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경제학 잡지 *Alternatives Économiques*는 최근 탈산업화 문제를 다루면서, 유로화의 강세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¹¹⁾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은 노동생산력과 임금비용을 통해 결정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은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주 35시간 노동제를 택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유로존 내 평균 노동시간보다 더 길다(Eurostat에 의하면 유로존 평균 주 35.2시간, 프랑스 35.3시간). 반면 프랑스 노동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10년간의 임금 성장률이다. 이 잡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프랑스의 임금 성장률은 32%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같은 기간 약 9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유로화의 강세는 현재 조금은 누그러든 상태이지만, 지난해까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만큼 유럽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웃나라 독일의 경우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다시 [그림 3]을 보면,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하락세가 매우 느리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세계은행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선 자료와 비교했을 때 무시할 수 있는 미세한 수치의 차이만을 보이는데, GDP 대비 제조업(manufacturing)의 비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유로존 평균이 15.5%인 데 반해, 독일의 경우 20.9%인 반면, 프랑스는 10.7%).¹²⁾ 이 같은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독일 제조산업의 특수성, 즉 고급화된 설비재 및 자동차 산업 덕분이다. 2008년 기준, 유럽국가들의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독일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자동차 한 대 기준, 임금비용은 프랑스보다는 20%가량 앞서

11) *Alternatives Économiques*(2012), “Désindustrialisation : un vrai problème de compétitivité”, Hors-série N 94. 6월호.

12) 이 자료에서 한국은 30.6%, 중국은 29.6%를 차지했다.

지만, 매출액에 있어서는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urostat). 즉 독일 제조산업은 유럽 평균보다 더 적은 노동시간을 투입하고 더 많은 노동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프랑스 및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 낸 셈이다. 종합해 보면, 프랑스 노동생산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비용이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 그 효과가 배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인접 국가인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프랑스보다 높은 임금비용, 적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위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독일 제조 부문의 독특한 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 생산성의 문제인가, 세계화의 문제인가?

제조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에 걸친 공장 이전 및 폐쇄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진단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잡지에서 2011년에 주관한 두 경제학자의 논쟁은 다소 상이하지만 유용한 분석을 제공해 준다.¹³⁾ 먼저 다니엘 코헨(Daniel Cohen)은 세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제조업 분야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제조업 부문 고용 파괴는 무역보다는 생산성 수익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부문에서 같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인력이 매년 4%씩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10~15%가량만이 국제무역과 관련돼 있고, 나머지 85~90%가 생산성 증대와 관련돼 있다. 반면 자크 사피르(Jacques Sapir)는 세계화가 탈지역화(Délocalisation)을 가속화하면서 제조업 부문 고용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생산성이 선진국들과의 세력 관계를 바꾸기에는 미약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개방과 함께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해

13) Alternatives Économiques(2011), "La mondialisation est-elle coupable?", No303. 이 잡지는 '세계화'를 주제로 두 경제학자의 대담을 실었다. 당시 Jacques Sapir 교수의 신간 '탈세계화' (Démondialisation, 한국에서는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됨)가 출판된 시점이라서 논쟁의 주제가 '세계화'였지만, '고용'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졌으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신흥국의 임금상승 속도가 과거 선진국이 경험한 것에 비해 훨씬 느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2007년 기준 자유무역(세계화)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당시 8%였던 프랑스 실업률이 3~3.5%였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다니엘 코엔의 경우 세계화가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문제는 세계화가 확산되기 이전인 80년대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산업 부문을 전공으로 삼고 있는 경제학자 장 루이 르베(Jean Louis Levet)는 보다 현실적인 견해를 보인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독일 제품의 고품질과 신흥국의 저렴한 가격 사이에서 프랑스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고 진단하며, “지난 몇 년간, 에어프랑스(Air France), 르노(Renault), 그리고 알스툼(Alstom)의 경쟁을 보면, 제조업이 회생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기술혁신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⁴⁾ 즉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은 노동비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 부족이라고 주장한다.

■ 맺음말

PSA 정리하고 계획안 발표 이후, 산업재건부 장관은 프랑스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의 현대 기아차 수입 제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EU 자유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발언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르몽드 신문에는 몽트부르 장관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다.¹⁵⁾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의 경쟁력을 우선 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 신문은 이보다 앞선 10월 9일자에서 제조업 부문 고용 문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정확한 경기 예측을 통해 경제적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¹⁶⁾

14) Le Monde, 2012년 10월 9일자, “L’industrie ne disparaît pas, elle se transforme”.

15) Le Monde, 2012년 10월 24일자, “Le pays du ministre excité”.

16) Le Monde, 2012년 10월 9일자, “Comment sécuriser les emplois industriels”.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선진국 내 제조업 부문의 쇠퇴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핵심은 이 분야의 경쟁력 후퇴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인데, 앞서 소개한 두 경제학자의 주장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화의 영향, 생산성 소득이 부딪치고, 단기적으로는 노동비용, 기업의 혁신 부족이 대립한다. 하지만 생산성 소득의 경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대화되기 때문에, 이는 경쟁력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력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비용의 경우, 이에 대한 유로화 환율 해석은 충분하지 못하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 산업은 유럽 내부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격의 상승은 프랑스보다는 독일에 더 큰 악재로 작용했다. 때문에 프랑스 제조업 쇠퇴의 원인을 유로화 강제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이라기보다는, 200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유럽 내부시장의 축소(구매력 감소)에서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¹⁷⁾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산업재건부 장관이나 사피르 교수의 주장처럼 세계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것, 둘째, 언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적절한 경기변동 예측을 통해 기업이 선행하여 구조개편을 하는 것, 셋째, 단기적인 처방으로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셋째 방안은 현 단계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단기적 처방이 자칫 구매력 감소로 인해 더 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대안 역시 프랑스가 단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결국 교과서적인 방법만 남게 된다. 하지만 넓게는 고용안정화에 대한 의제 설정, 좁게는 프랑스 2차산업(제조업) 전반에 대한 강한 위기 의식 속에서 전방위적인 국가 개입이 예상되며, 이는 다양한 실험과 모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5년은 “제조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될 뿐”이라고 말한 장 루이 르베의 말처럼, 프랑스 제조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KLI**

17)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된 것이 아닌 필자의 선택적인 판단이며, 오류의 가능성이 다분하다.